

월요광장

쉽게 하는 창조



이 상 면  
광주대 교수

당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고물들을 사서 무려 만 배가 넘는 이윤을 보았다고 합니다. 금속은 녹여서 작은 자유의 여신상을 만들고, 시멘트와 목재는 여신상의 받침대를, 가벼운 금속은 뉴욕광장을 본뜬 열쇠고리를 만들어 기념품으로 창조해 낸 것입니다. 재료가 자유의 여신상에서 나온 진짜이니 그 기념품들은 당연히 불티나게 팔리나가 없어서 못 팔 정도였다고 합니다.

요즘 강조되는 이른바 브리콜라주(Bricolage)의 좋은 사례입니다. ‘브리콜라주’란 주어진 환경에서 어떠한 재료들이라도 최선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창조적 기량을 말하는 것으로, 전혀 쓸모없을 것 같은 재료로도 필요할 것을 만들어내는 기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창조적인 사고방식은 쓰레기를 쓰레기로만 생각하지 않는 사고방식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문제를 풀기위해 상식적이고 논리적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식과 논리로 답이 없으면, 생각을 바꾸어야 되는데 이내 포기하고 맙니다. 그런데 사실 바로 그때가 창조의 시작입니다. 창조의 시작은 생각을 바꾸는데서 비롯됩니다.

창조는 과거의 이론에서 찾아낸 개념과 사상을 새롭게 활용하는 일종의 브리콜라주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기반으로 기존 것들을 창조적으로 ‘재조합’ 하는 것이 창조적 혁신입니다.

세상에 전혀 새로운 것은 없습니다. 모방을 거치지 않은 새로운 것은 없습니다. 모방은 가장 탁월한 창조 전략입니다. 고수는 남의 것을 베끼고, 하수는 자기 머리를 쥐어짜니다. 그 결과 고수는 창조하고, 하수는 제자리걸음입니다. 모방을 축적하다 보면 정말 문제의 해결책이 발견됩니다.

애플의 스티브잡스와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는 결코 새로운 평가를 받았던 것이 없습니다. 그들은 아이디어를 훔쳤을 뿐입니다. 상식이나 논리가 통하지 않는 문제점이나 한계를 인식, 해결책을 찾고자 했고(search), 활용 가능한 최선의 것을 가져와서 조합(combine)했을 뿐입니다.

그것이 그들이 한 창조입니다. 엄밀히 말해 모든 창작물은 모방입니다. 과거의 것을 가져오되, 자기 스스로 발견한 문제점을 중심으로 정리하면 과거의 것이 아닌 차별화된 창조적 작품이 됩니다.

홍내를 잘 내는 것에 새로운 문제의식 즉 ‘모방 + 문제의식 = 창조’ 가 새로운 창조 패러다임입니다. 핀테크 선두주자 ‘스퀘어’ 창업자 짐 매캘비는 원래 유리 세공 기술자였습니다. 유리 세공 작품을 팔아 생계를 유지하던 중 신용카드를 결

재할 단말기가 없어 거액의 손님을 놓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는 여기에서 바로 창업의 실마리를 잡았고, 그것이 단말기 없이도 신용카드로 계산할 수 있는 모바일 포스시스템이었습니다.

창조를 위해서는 현장에서 느낀 문제 혹은 한계에 대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창조행위에는 주어진 한계를 적극적으로 깨닫고 활용할 흔적이 보입니다. 누구든 현실에서 반드시 한계를 만나게 되는데, 그 고비에서 기존의 이론과 경험들의 재조합을 통해 새로운 시선을 가지고 세상을 다시 보게 됩니다.

독서, 명상, 여행, 특히 좋은 사람, 좋은 경험과의 만남이 중요하고, 인문학 및 예술적인 시야가 필요한 이유가 그들이 새로운 세상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스승이 세 명의 제자들에게 엮은 한 잎을 주면서 무엇을 사서든지 방을 가득 채워보라는 문제를 냈습니다. 첫 번째 제자는 깃털을 사서 채웠으나 부족했고, 두 번째 제자는 찌르개 채웠지만 많이 부족했습니다. 세 번째 제자는 달걀 양초 하나만을 샀습니다.

밤이 되어 양초를 켜자 작은 양초는 환하게 빛나며 방안 전체를 밝음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시야를 바꾸어 양초 하나를 찾아낼 수 있는 쉬운 창조들이 모여 힘겨운 우리 사회가 밝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법조칼럼

장발장의 소멸을 바라며



조 영 희  
변호사

이와 반드시 일치하는 사안은 아니지만 범죄행위와 그에 대한 형벌의 불균형성에 비추어 볼 때,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도 흔히 장발장이라고 불리는 형벌조합이 있었습다. 즉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4 제1항에서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던 것이 그것입니다.

그런데 형법 제329조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여 볼 때, 위 장발장법은 형법상 절도죄와 그 기본적인 범죄구성요건은 동일하나 그 형에 있어서 벌금형의 부재는 차치하고서라도 다른 감경사유가 없다면 반드시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는 심각한 불이익을 초래하게 되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상습성이 인정되는 피고인이라면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고 빵을 한 개 훔치더라도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것이 예상되므로 통상적으로 구속기소를 면하기 어려울 것이고, 법원은 실제로 3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상습성이라는 행위의 표지가 개입되어 있기는 하나 그 개념이나 판단의 기준이 반드시 명확한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아무리 경미한 범죄라도 상습성만 인정된다면 예외 없이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야 하는 것이어서, 과연 그것만으로 이와 같은 중한 형벌의 가중이 타당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의문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2월 26일 헌법재판소는 간통죄 위헌결정과 함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4 제1항 중 형법 제329조, 형법 제329조 미수죄에 관한 부분은 별도의 가중적 구성요건표지를 규정하지 않고 형법조항과 똑같은 구성요건을 규정하면서 법정형만 상향 조정하여 형사특별법으로써 갖추어야 할 형벌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을 잃어 헌법에 위반된다는 내용의 위헌결정을 하

였습니다. 이에 따라 위 조항은 더 이상 형벌조합으로써의 효력을 갖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더 이상 절도죄에 있어서 장발장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도 우리가 그 적용을 받거나 적용하고 있는 수많은 법률의 구성구석 어딘가에는 여전히 법체계상 헌법에 위반되는 조항들이 숨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위헌조항들은 간통죄의 위헌결정과 같이 국민 법 감청이나 도덕 감청의 변경과 같은 현실적인 이유에 의한 것일 수도 있고 이 사건에서와 같이 당초부터 법의 이형성을 맞추지 못하여 불합리하였던 것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보면서 그와 같은 법률조항들에 관하여 끊임없는 의문을 품고 그것을 지극히 개인적인 의문으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인 문제제기와 공론화를 통해 개선시키는 것이 국민의 인권보호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법조인의 의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기 고

영호남 ‘상생과 화합’ 이제는 실천할 때다



명 현 관  
전남도의회 의장

을 계기로 협약을 맺게 되었다. 이번 협약은 상생발전 공동 합의에 따라, 양 의회가 지역의 공동발전과 국민대통합, 나아가 대한민국의 번영에 이바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실 두 지역은 정치권에서 야기된 편협한 지역주의 때문에 오랫동안 갈등을 빚어 오고 있다. 한국이라는 조그만 땅에서 동서로 갈리고 남북으로 대치 한다는 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가? 하지만 양 지역은 민주화를 위해 피를 흘렸다는 공통점도 갖고 있다. 대구의 2.28과 광주의 5.18은 학생과 시민이 중심이 되어 전개한 민주화 운동이다.

이번에 우리도를 방문한 경북도의회 의장단도 이를 기리기 위해 국립 5·18민주묘지를 참배했다.

이러한 과정들을 거치면서 양 의회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지방분권의 시대적 변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하는 행위에 공동 대처하고, 양 지역의 특성을 최대한 살려 발전을 위한 노력들을 함께 해나가기로 했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첫째, 전남도와 경북도가 호국 종철의 고장임을 널리 알리고 국민대통합의 정치를 선도해 갈 수 있도록 양 도민의 이해 증진과 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고, 둘째, 시대적 과제인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역의 특성을 최대한 살려 영호남이 공동 발전할 수 있도록 상호 유대감 형성에 노력할 것과, 셋째, 정기적인 교류를 통해 지방의회와 지역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동반자 관계를 유지·발전시켜나가는 것이다.

또한 이를 위한 실천과제로 삼일위원회 연찬회 개최, 합동심포지엄 개최, 전직 대통령 생가 방문, 도민의 날 및 생활체육행사 정례 교류, 영호남 공동협력사업 적극 발굴과 교류협력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기로 했다.

이러한 양 도의회간의 우호증진 노력은 이제 자치단체 차원을 넘어 범 정부차원의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계획과 실천으로 이어져야한다.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공약 가운데 관심을 끌었던 것이 ‘동서통합지대’ 조성

였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3년 12월 말 열린 제3차 국토정책위원회에서 전남과 경남의 경계인 섬진강 양안을 문화·관광지대, 신성장 산업 벨트 등으로 조성하는 동서통합지대 조성 기본 구상을 발표했다. 2020년까지 전남 동부와 경남 서부를 동서화합과 신성장 거점으로 육성하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하지만 박대통령 임기 3년차인 지금까지 이 사업 역시 지지부진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동서화합을 위해서는 도의회나 지방정부 부처원의 활동들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정치권과 정부가 진지한 자세로 가시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그간 지역갈등을 조정하여 중앙정치에 이용했던 ‘정치 지역구도’의 악습을 타파하고, 지역 간 거리를 좁혀 인적·물적 교류를 증대시킬 수 있도록 도로·철도망이 확대되어야 한다. 또한 문화, 예술분야에서도 교류의 폭을 넓혀 민간단체뿐 아니라 양 지역주민 모두가 자연스럽게 상생과 화합의 물결에 동참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社 說

가거도 헬기사고도 ‘안전불감’ 탓이라니

13일 밤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방파제 남쪽 1마일 해상에서 목포 해양경비안전서 소속 B-511 헬기가 응급환자를 이송하기 위해 착륙을 시도하던 중 바다에 추락했다. 이 사고로 헬기에 탑승한 4명 가운데 구조된 정비사 박근수 경장이 숨지고 조종사 등 3명은 실종된 상태다.

이 헬기는 이날 오후부터 맹장염 증세를 보이던 A(7)군을 목포의 한 병원으로 이송하기 위해 이륙했다가 인근 해상에서 낚시용 해물로 사고가 나 안타까움을 더해주고 있다. 해경과 해군은 실종자와 헬기 동체를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을 과중하게 진행하고 있지만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이번 사고 역시 안전불감증에 의한 인재(人災)라는 점에서 충격을 금할 수 없다. 주민 500여 명이 살고 있는 가거도에는 응급환자 발생시 해경 헬기가 ‘생명줄’과 같지만 착륙장이 없어 방파제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야

간에는 헬기가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도록 조명시설 등 유도장비가 갖추져야 하나 아무런 시설도 없다고 한다.

주민들이 수신호로 착륙을 유도하는 경우가 많더니 예고된 사고나 다름없다. 사고 당시 짙은 해무가 끼었지만 관제소가 통제를 하지 않은 것도 화를 키웠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현재 전남지역 유인도 296곳 중 야간 이·착륙이 가능한 섬은 21곳뿐이고, 운동장 등 이·착륙을 할 수 있는 곳도 39개 소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섬 주민들은 아파서는 안 된다. 자조 섞인 이야기까지 하고 있다. 가거도 주민들이 이번 헬기사고에 좌절감마저 든다고 하는 것도 이런 이유다.

정부와 전남도는 헬기 착륙장을 전체 유인도서에 설치하고, 야간에도 이·착륙할 수 있도록 유도장비를 확충해야 한다. 또 전남도는 운영 중인 닥터헬기의 운항 거리를 100km 이내에서 더 늘려 수해지역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학부모들도 놀란 아이들의 위험한 등굣길

올해 광주여성민우회가 추진하는 ‘등굣길 아동 길동무’ 사업에 신청한 학부모들이 100명이나 됐다고 한다. 그만큼 아이들의 등굣길이 위험하다는 사실과 함께 학부모들의 불안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보여주는 사례라 하겠다.

실제로 이들 30~40대 ‘엄마 길동무’ 7명이 올해 신청기를 맞아 광주 시내 몇몇 초등학교에서 매일 아이들의 등굣길 도우면서 느낀 감회도 크게 다르지 않다. 학부모들은 초등학교 인근에서 아이들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것을 도우면서 가슴이 철렁한 건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입을 모은다.

본보 취재기자도 이들 학부모들과 동행하면서 아이들의 등굣길을 지켜봤다. 지난 12일 광주 두암동의 인도가 없는 도로에서는 빠른 속도로 질주하는 승용차가 우르르 뛰어나가는 어린이들을 맞닥뜨리자 급정거하는 위험천만한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곳은 스크론편(어린이보호구역)이

었다. 교차로에서는 시속 30km 이하로 운행해야 하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운전자가 모퉁이에 불법 주차된 차량에 가려진 아이를 못 본 탓도 있었다.

불법주차차나 교통안전 불감증은 아이들의 사고 위험을 더욱 높이는 주범이다. 지난해 스크론편 내 13세 미만 아동 교통사고는 광주 20건(사망 1명·부상 19명), 전남 21건(부상 22명)이나 됐다. 운전자의 안전의식이 달라지지 않고 있으니 신호 위반과 과속 등에서 비롯되는 ‘스크론편 사고’ 역시 여전히 줄지 않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광주는 교통사고율(자동차 1만 대당·인구 10만 명당 사고건수와 교통사고 사망률 전국 1위라는 불명예를 수년째 이어오고 있다. 아이들의 등하굣길 안전을 위해서는 학교 주변 인도에 난간을 설치하고 교통법규 위반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지자체의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어른들의 교통안전 의식 개선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無 等 鼓

2001년 3월 25일, 아프가니스탄 전 지역에서 물러난 탈레반들이 수도인 카불 서쪽 125km 지점에 위치한 바미안 지방에 집결했다.

힌두쿠시 산맥의 깎아지른 사암절벽 아래 자리를 잡은 탈레반들은 세상에서 가장 큰 석불 ‘파파뽀다’ 앞에 탱크를 세워놓고 불상에 마구 포탄을 쏘아댔다. 높이 53m에 이르는 파파뽀다가 온갖 폭약과 포탄 세례에도 좀처럼 부서지지 않자 탈레반들은 북쪽에 있는 좁다란 규모의 ‘마마뽀다’부터 파괴

‘바미안 석불’ 파괴는 문화·예술 및 공공시설 파괴행위를 일컫는 반달리즘(Vandalism)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당시 아프간 지배세력이지 이슬람 원리주의 무장단체인 탈레반이 석불을 부순 것은, 타 종교의 상징인 불상을 신성한 이슬람교에 대한 모독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반달리즘은 스페인 침략자들에 의한 앙카문명의 파멸, 십자군 원정으로 인한 바빌로니아·마케도니아 지역의 황폐화의

등 수많은 문화·문명의 파괴를 불러왔다. 우리 나라에서도 고려시대 몽골의 침입으로 대장경이

소실된 것을 비롯해 임진왜란 당시 왜군들에 의해 수많은 문화재가 파괴되고, 병인양요 당시엔 외규장각에 보관된 책들이 약탈당하는 등 적지않은 피해를 봤다.

최근 수니파 무장조직인 이슬람국가(IS)가 파파뽀다 앞에 집결한 탈레반들은 이번엔 위에서부터 불상을 파괴해나갔다. 매일 두세 번씩 이어진 폭파직은 거대한 불상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계속됐고, 2세기경부터 아프간을 지켜 온 ‘바미안 석불’은 수천 년간 비와 바람을 막아주던 움푹 댐 구멍만 낀 채 영원히 자취를 감췄다.

/홍행기 경제부장 redplane@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申港樂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우편번호 501-710)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32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생활부 2200-661	< F A X 222-8005 >	< F A X 222-0195 >
정치부 2200-642	여론매체부 2200-696	광고매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대표 FAX 222-4918)	체육부 2200-697	< F A X 227-9500 >	< F A X 227-9500 >
사회부 2200-663	사 진 부 2200-693	디자인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대표 FAX 222-4267)	조 사 부 2200-571	프로젝트팀 2200-555	< F A X 02-773-9335 >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자투고·기고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0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96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